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The U.S. and Japan Trade Fri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김 영 춘 (Kim, Young Choon)*

< 개 요 >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된 요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의 구성은 제 2절에 미·일간 통상마찰의 발생요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미·일간 통상마찰의 특징과 전개과정을 미국의 통상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제 4절에서 미·일간 통상마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결론에서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통상정책에서 타결이 불확실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다자간 협상 보다 쌍무적인 협상을 선호하여 이익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은 쌍무적인 협상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주창하며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I. 서 론

세계무역은 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일부 선진제국의 협조로 수립된 IMF-GATT 체제하에서 관세인하, 무역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다국적기업의 활동 확대, 세계시장의 다원화, 산업내 국제분업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전후 세계무역의 증가율은 생산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였다. 1960년대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액

* 제주대학교 상업교육과 교수

증가율이 연 평균 10.1%, 7.1%로 나타났으며, 또한 세계 수출량은 동기간 중 연평균 8.1%로 이는 국제간에 경제교류의 확대로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상호의존도의 심화는 경제불황을 맞아 대외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보호주의이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경제환경은 급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달러와의 금 태환 금지 선언과 스미소니언(Smithsonian)협정에 의한 미 달러의 평가절하, 환율변동폭 확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인하여 전후 국제통화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던 IMF체제는 동요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제국의 경기침체, 긴축정책, 무역불균형 확대, 실업률 증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전후 무역정책의 기본골격이었던 GATT의 자유무차별의 원칙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장기정체를 배경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선진국간,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간 무역마찰 문제를 야기 시켰다.

1980년대 후반 엔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어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본격적인 통상압력이 특정시장 및 분야별(Market-Oriented and Sector Selective: MOSS) 협의, 미·일 구조조정협의(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 SII) 등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다. 미·일간 자동차산업부문의 분쟁은 다른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친 분쟁으로 확산되었고, 과거에는 특정분야에서 일본기업이 미국 시장을 문란시키는 경우에만 무역마찰을 빚었으나 일본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일본 국내의 규제, 상관행·통상정책 등이 마찰대상으로 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경제마찰의 내용이 변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점점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개별분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의 경제는 정보·통신·교통·운송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재화와 용역의 이전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국제경제활동을 통한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일본의 주요업종이 국제경쟁력 강화로 미국의 관련업종에 비교열위의 현상이 나타나 국민경제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경제면에서는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고물가와 통화가치 하락의 가능성을 유발시키게 되고, 국내경제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노동자의 실업·기업의 경영악화 등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조정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통상

마찰의 배경은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국제분업이 진전 내지는 고도화됨으로써 각국의 비교우위구조 및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수출입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교우위원리에 따른 이익을 받는 산업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고, 조정코스트 부담도 클 때에 보호주의적 정책수단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대한 반발로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가간의 통상마찰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과거의 마찰이 극히 제한적으로 품목별로 발생하곤 했으나, '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각국 경제가 정체됨에 따라 무역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국제경제질서는 경제·산업구조변화에 대하여 적응력이 상실되어 경제전반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환능력은 결여되어 있고 또한 구조조정비용이 막대한지라 각국은 이러한 여건을 대외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어 마찰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국제문제의 하나로서 제기되고 있는 미·일을 비롯한 선진제국 사이의 통상마찰은 국가간의 협력이나 나아가 자유무역주의의 추구가 결국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국제경제 현실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경제적 이해의 조정이 외교·군사적 고려도 동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는 국력을 배경으로 하는 협상 및 타협과 같은 역학관계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경우, 전후 심화되어 온 경제·군사 및 정치적 상호의존성으로 미루어 협력이라는 전제는 지속되겠으나 선진국 중심의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외관계에 있어서 미·일 두 국가에 대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체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일간의 통상마찰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정부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호 육성해 온 것은 자동차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향후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에 따른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발생요인과 배경 그리고 마찰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여 보고, 한국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다.

Ⅱ. 미·일간 통상마찰의 발생 요인과 배경

통상마찰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정책(무역, 국제금융, 기술이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그 국가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분쟁이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 진출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억제 또는 그 국가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응 요구가 나타나는 통상 메카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상호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통상마찰은 국내 경제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 수출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써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의 정서적인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현상이다. 통상마찰 현상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60년대 중반이후 국제분업화의 진전에 의해 양국의 산업구조의 동질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품목에 있어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경합관계가 증대되는 속에서 자원파동, 불황 및 인플레이 등이 겹쳐 실업률 증가, 국제수지의 악화와 같은 여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관리무역정책의 채택을 고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관리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의 약화와 쌍둥이 적자(무역수지적자·재정수지적자)의 확대에 따른 공격적 상호주의와 결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일본의 산업이 경공업, 중화학공업, 조립가공업형으로 고도산업화 되면서 통상마찰의 대상품목도 섬유, 철강, 칼라TV, 자동차, 반도체, 공작기계, VTR 등 기초소재형의 제품에서 지적집약형 고도가공제품으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일본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통상문제가 안전보장문제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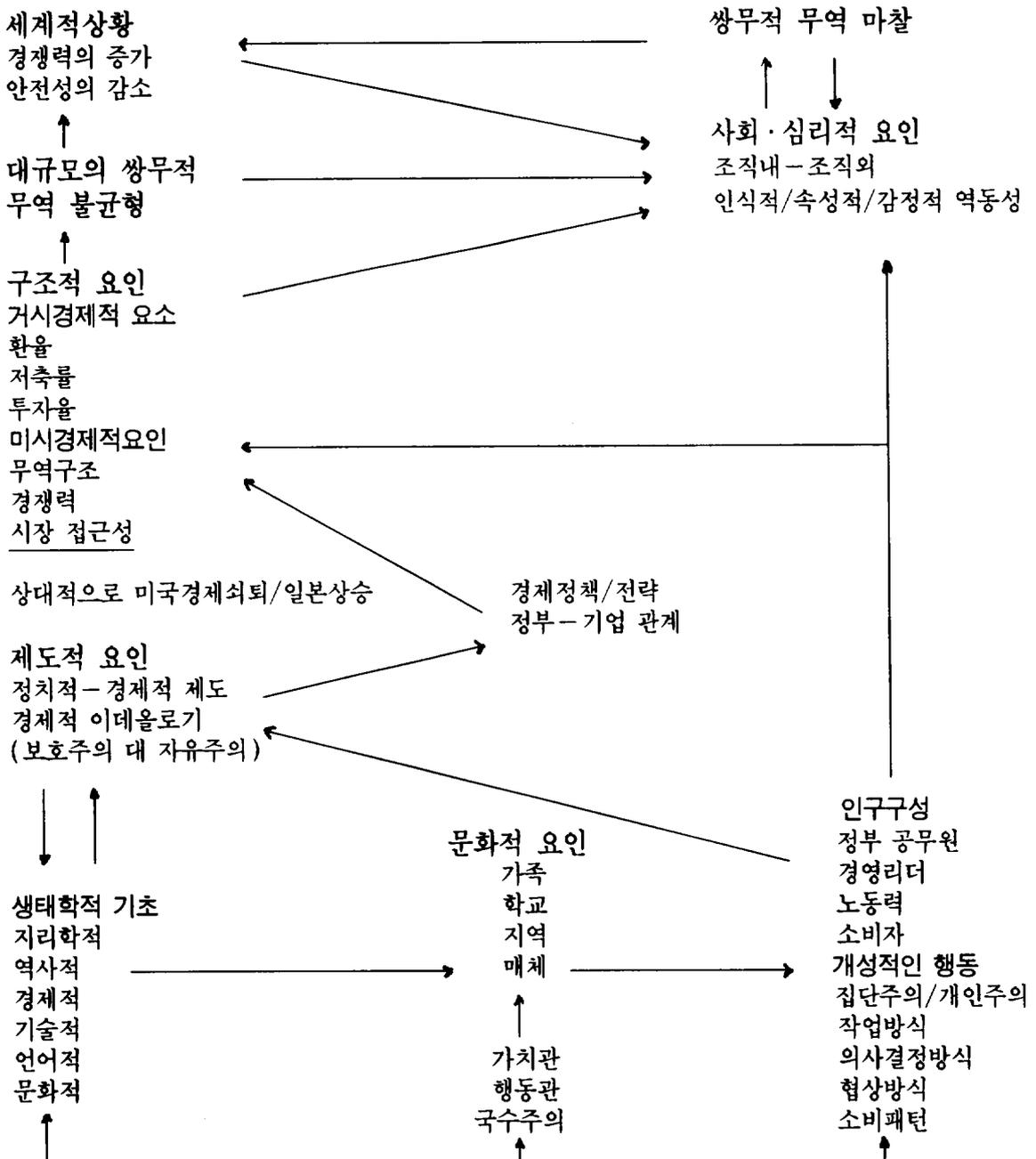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 쌍무적인 통상마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일간의 통상마찰이라 할 수 있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경제적인 實利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군사관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국간의 딜레마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대체로 정치경제학자들은 마찰의 심화는 미국의 무역수지의 적자 확대가 일차적인 이유로 간

주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무역긴장을 위한 정치적인 피뢰침(political lightning rod)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일간의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은 네가지의 카테고리 요인인 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발생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간의 비대칭적인 관계와 각 요소간의 상호 복합적인 연관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국간의 문화적인 요인간의 차이에서부터 근원적으로 통상마찰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이데올로기, 정치·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도적인 요인은 다시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의 쌍무적인 무역불균형을 야기시키게 되고, 여기에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세계적 환경 요인에 의하여 통상마찰 정도를 심화시키게 된다.

미·일간에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은 문화적인 소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양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통상마찰에 따른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의 차이, 문화의 다양성에서 오는 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인은 일등국민의 자부심과 개인주의적이고 격식을 싫어하는 직선적인 사회인 반면에 일본은 개성이 강한 천재보다는 조화를 중시하고 체질적으로 집단 우선 정신과 배타적이고 특히 일본인들은 좋고 나쁜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대규모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미국 자체의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인 일본측에서 비협조적인 경제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일본측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인식의 차이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일간의 무역수지가 1964년까지는 미국이 상당한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1970년대 말에는 양국간의 엄청난 무역수지 불균형과 총무역수지 또한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에는 미국의 총무역수지 적자가 1,596억 달러로써 이 가운데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569억 달러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후 미국은 몇 년 동안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1991년에는 미국의 총무역수지가 73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443억 달러로 미국의 총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적자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6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국과 일본간의 통상마찰 주요 요인



자료 : Karen M. Holgerson(1998), *The Japan - U.S. Trade Friction Dilemma*, Ashgate, p.6.

<표 1>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 패턴 비교

미	국	일	본
수평적 사회 평등: 차별(나이, 역할, 계급)을 인정하나 그다지 강조하지 않음 성과(취)를 통한 지위 능력, 경험을 강조		수직적 사회 위계, 차별(나이, 역할, 계급)을 표면상으로 인정 귀속을 통한 지위 협동, 역할 강조	
비전통주의 변화, 자발적행위에 가치를 둠		전통주의 지위, 예측력, 적당한 장소에 가치를 둠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속성(재능, 능력, 경험, 근면)에 가치를 둠 자기의존도 강조		집단주의 조직합동(가족, 학교, 일, 지역, 국가)에 가치를 둠 관계를 강조	
목표 지향 목표의 수행, 능력, 경험에 가치를 둠 사실, 숫자에 가치를 둠. 작성된 의사소통, 협정을 중요시 함 다양한 의사결정 스타일		인간관계지향 조화: 원활한 인간관계 강조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가치를 둠 지관에 가치를 둠 일대일 의사소통, 협의를 중요시 함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스타일	
보편주의 자유주의에 가치를 둠		배타주의 상황적 상대주의에 가치를 둠	
직접성 정직하고 솔직해야 함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함 명백한, 구두의 의사 소통 스타일에 가치를 둠(당신이 말한 의미: 당신이 뜻하는걸 말하기) Yes 와 No가 분명		간접성 일대 일 대화를 아낌, 개인의 의견을 보호함 암암리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가치 둠 (말하지 않는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비공식적 서열이나 직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행동		공식적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살피면서 말하거나 행동	
능동적(활동적) 독단적이다. 스스로 판매, 행동을 취함.		수동적(소극적) 겸손하고 신중하고 내성적이고 참을성이 있다.	

자료: Karen M. Holgerson(1998), Ibid, pp.49-50.

<표 2> 미국의 총무역수지 및 대일무역수지

(단위: 10억달러)

	대일수출	총 수출	대일수입	총 수입	대일무역수지	총무역수지
1960	1.5	19.7	1.1	14.8	0.5	4.9
1965	2.1	26.5	2.4	21.5	-0.4	5.0
1970	4.6	42.5	5.9	39.9	-1.2	2.6
1975	9.6	107.1	11.3	98.2	-1.7	8.9
1976	10.2	114.7	15.5	124.2	-5.3	-9.1
1977	10.6	120.8	18.6	151.9	-8.0	-31.1
1978	13.0	142.1	24.5	176.0	-11.6	-33.9
1979	17.6	184.4	26.3	212.0	-8.6	-27.6
1980	20.8	224.3	31.2	249.8	-10.4	-25.5
1981	21.8	237.0	37.6	265.1	-15.8	-28.0
1982	20.7	211.2	37.7	247.6	-17.0	-36.5
1983	21.8	201.8	42.8	268.9	-21.1	-67.1
1984	23.2	219.9	60.2	332.4	-37.0	-112.5
1985	22.1	215.9	65.7	338.1	-43.5	-122.2
1986	26.4	223.3	80.8	368.4	-54.4	-155.1
1987	27.6	250.2	84.6	409.8	-56.9	-159.6
1988	37.2	320.2	89.8	447.2	-52.6	-127.0
1989	43.9	361.7	93.5	447.4	-49.7	-115.7
1990	47.8	388.7	89.6	497.6	-41.8	-109.8
1991	47.2	416.0	91.5	489.4	-44.3	-73.4
1992	47.8	448.2	96.5	532.7	-48.7	-84.5
1993	46.9	464.8	106.2	580.5	-59.3	-115.8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Statistics

미국의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동안 일본의 최신 공업기술에 의해 제조된 수출상품이 높은 부가 가치를 지니면서 미국으로 확대 수출되기 시작했고, 한편 일본의 상품은 신뢰도가 증가되면서 미국이 경제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라이벌 관계로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번영과 안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임승차에 의한 국제경제질서를 이용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무역규범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쌍무적인 무역협정에 의하여 무역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측의 주장은 일본이 덤핑과 가격인하와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공식적인 무

역장벽보다 비공식적인 무역장벽에 의한 국내시장의 봉쇄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적 무역장벽의 유형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제한 요인, 유통구조, 거래행위상의 요인, 제도적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주로 일본의 다양한 행정규제와 문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 통상정책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특히 일본의 유통구조는 상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복잡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면적(10km) 및 인구밀도 (1,000명)당 소매점 수를 보면 미국은 8.7점포, 서독은 28점포인데 비해 일본은 230.5점포로 영세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유효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기 어렵고 막대한 노력을 강요받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리베이트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메이커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적정 마진이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은 유통구조를 무시하고 어느 특정 백화점이나 도매상만을 상대로 직거래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상품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이 사실상은 저금리에 의해 부당히 낮게 책정된 생산원가와 과소 평가된 엔화의 대외가치로 인해 이중으로 왜곡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엔화의 실세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측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오히려 미국 경제정책상의 문제로 인하여 무역불균형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낮은 저축률, R&D투자의 부족, 교육수준의 저하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국의 수출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산업의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와 기업간의 합병·인수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지 않은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미국의 상품들이 품질, 판매와 서비스 개선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식 포드주의¹⁾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자본의 다국적화로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은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외직접투자의 증대는 미국내의 가용투자재원의 축소를 가져와 국내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미국 내에는 2차 산업의 쇠퇴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1) 戰後 미국 자본의 지배적인 생산방식은 포드주의적인 大量生産方式이다. 즉 테일러주의에 의한 動作分割과 自動化의 結合에 의해 標準화된 제품의 大量生産이 가능한 生産방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大量生産체제에 의해 勞働生産性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초로 노동자계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있게 하였고, 이 高賃金은 다시 購買力으로 이어져 大量生産된 제품을 大量消費 할 수 있게 함으로써 戰後 好循環에 의한 고도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戰後 好循環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를 體制內化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일본측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단기간 이익을 위한 관심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생각해야만 한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상품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본과 자원을 투자해야만 한다. 또한 미국은 공교육제도의 질을 개선해야만 하고 모든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생산자들은 보다 세계적인 마인드화를 가져야 그들의 수출상품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일본의 구조적 무역장벽 유형

구 분	내 용
1. 기업의 행위적 측면 (경쟁제한요인)	수입제한 카르텔, 판매지역 카르텔, 병행수입의 억제, 희망소매가격제 실시, 경품규제, 수입관련단체행동(신규진입억제)
2. 유통구조상의 요인	위험분산형 및 상호의존형 유통조직, 강력한 유통계열화의 실시, 다단계적인 유통경로
3. 거래행위상의 요인	일반적 행위: 인간관계중심의 행위, 안정적 계속적 거래의 중시, 계약보다 상호교섭과정 중시, 의사결정 과정상 불투명성, 다양하고 엄격한 거래조건, 위험분산 및 다품종·소량·고빈도 구매행동
	특수한 행위: 기업집단내 거래우선, 계열기업간 하청거래, 반품제·리베이트제의 성행, 건치제(建値制)의 성행, 파견점원제의 성행, 상호거래의 실시, 재판매 가격제의 실행, 종합상사의 수입대리점활동
4. 제도적 정책적 요인	유통관제법규의 복잡성 대규모소매점법의 실행 독점금지법의 소극적 운용 수입총대리점제의 실행 정부규제체도의 존재(인·허가규제) 개별상품판매규제(주류, 의약품, 쌀) 대규모 점포출점규제(트럭운송, 창고업) 정부의 각종 행정지도 수입억제정책의 실시(수입할당제도, 수입승인제도, 기준인정제도) 국영무역·정부조달의 실시 수입절차의 복잡, 엄격
5. 사회적 요인	생선중심의 식생활 생활공간, 주택구조의 특이성 외국제품의 배타성 존재(국산품 애용정신) 내외가격차의 발생

자료: 조병택·이영준(1992), 「일본의 수입유통과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Ⅲ. 미·일간 통상마찰의 특징과 전개과정

3.1. 미·일간 통상마찰의 특징

미·일간의 통상마찰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태적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태적 특징이란 미·일간 통상마찰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쟁점화되고, 어떻게 협상을 거쳐 해결되는가 등과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서 GATT체제하에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과 공정무역을 통해 자유무역의 기조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세계 경제적 지위확보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았으며 이는 공화·민주 양당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 물론 1970년대에도 미국은 섬유, 철강, 신발,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GATT의 자유무역규범을 일탈하는 보호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내에는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이해집단이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일련의 무역법안들이 제정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규정을 구체화한 통상법 301조를 1974년에 제정하였다.

미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대개 통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의 근간은 주로 통상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형성되거나 변경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법은 통상정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관세법 337조 등의 통상관련법 조항들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성격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4 참조>. 여기에 더하여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거시적 형태로 관리무역(managed trade)을 행하고 있다. 즉 미국은 특정국가와 포괄적으로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87년 민주당 Gephardt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이 법안은 일본을 염두에 두고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흑자폭을 매년 10%씩 삭감해 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통상정

책을 결정하는 무역 관련 법률로서는 1988년에 제정된 ‘무역 및 경쟁력에 관한 종합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이 있다. 여기에는 슈퍼 301조와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을 평가하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여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0년에 제정된 농업 관련 법안(1990 Farm Bill)과 1992년에 제정된 수출촉진 법안(Export Enhancement Act of 1992)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통상관련법들을 강력하게 적용함으로써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행정명령의 비교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대통령행정명령
근거 법령	1979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좌 동	1994. 3. 3. 대통령 행정명령
적용 대상	특정불공정교역행위, 정책, 관행	지적소유권분야의 불공정행위, 정책, 관행	특정국가의 불공정행위, 정책, 관행 전부	특정국가의 특정 불공정교역 관행
지정의 종류	지정없음	감시대상국 (Watch List)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 PFC)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가의 특정관행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 : PFCP)
적용 기간	1974년 이후	1988년 이후 실제 적용은 1989년 이후	1989년, 1990년	1994년, 1995년
발동 절차에 관한 사항	매년 3. 31. 이전에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s (NTE) 제출	NTE제출후 30일 이내에 PFC지정, 지정후 31일 이내 조사개시	좌 동	NTE제출후 6개월이내 PFCP지정, 기타의 점은 좌동

자료: 법무부, 「UR 협정의 법적 고찰(上)」, 1994. p. 618.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특징은 국민최우선주의, 신중한 행동주의, 결과지향주의, 전략적 무역정책, 강력한 위협 등의 몇 가지 개념들로 집약시킬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당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공정무역을 유달리 강조해 왔으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천명하여 왔다. 이와 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의지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과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GATT협정과 기타 국제규범 및 다자간 무역협정 그리고 국내 통상법의 활용을 통해 그와 같은 자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994년 무역수지 적자가 1,663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무역적자에 당면한 미국 행정부는 해외시장의 개방확대를 통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수지개선과 국내고용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 행정부는 외국의 시장개방과 미국 기업 및 상품의 공정한 경쟁여건 확보를 위하여 i) 주요 교역국에 대한 301조 등 일방주의적 수단의 활용, ii)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의 강화, iii) 환경, 무역, 투자 등 다자간 무역규범의 정립, iv) 미국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표 5 참조>.

한편,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미국의 통상제도 면에서의 특징으로서 미국업체의 구제 요청에 따라 미 의회의 보호주의를 의결하게 되면, 미 행정부의 통상교섭 개시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협상을 타결시키는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서 행정부에 의한 통상교섭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성격도 점차 보호주의화하는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미·일 마찰의 특징은 특히 마찰의 제기와 협상타결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취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미국 사회내의 각 계급들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표 5> 미국 통상정책의 추이

년 대	경 제 여 건	정 책 방 향	주 요 조 치
전후~ '60년대	- 전후패권국으로서 압 도적인 경제력 확보	- 자유무역 질서 확립, 세계무역 확대	- GATT 창설주도 및 다자간 관 세 인하 - 개도국에 대한 예외적인 우대조 치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

년 대	경 제 여 건	정 책 방 향	주 요 조 치
'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EC 및 NICs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미국의 무역 수지 악화 -실업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신보호 무역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통상법 및 '79 통상협정법 제정을 통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및 반덤핑, 상계관세규정등 강화 -섬유, 신발, 철강 등 사양산업보호를 위해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및 수출자율규제협정(VER)등을 통해 수입 규제 조치 강화
'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 -무역수지적자 및 재정수지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fair trade)원칙을 앞세워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쌍무협정 추진 -'74 통상법 301조 및 '88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에 의거한 일방적 보복조치 강화 -UR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 이외에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등에 대한 국제무역규범확립 유도
'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경쟁력 악화 -무역·재정수지 적자확대 -WTO체제 출범 -실업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간규범에 근거한 통상압력 강화 -지역간협정에 의한 무역 및 투자확대 -통상법시행의 강화 -환경정책의 강화 -경쟁정책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규정등 수입규제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제재 조치 -헬름즈-버턴법, 이란·리비아 제재법등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 -대미안마 경제 제재 조치 -미일구조조정협약 -미일포괄경제협상

자료: 재정, "한·미 통상현황과 정책방향", 「월간재정」, 1995. 3, p.15.에서 정리

3.2. 미·일간 통상마찰의 전개과정

미·일간의 통상마찰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제성장과 産業化 軌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따라서 일본의 산업화가 대미 통상마찰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원인은 일본의 수출입구조의 특수성과 산업화의 특성에 있다. 즉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일본측의 수출지향형 성장정책과 집중 호우식 수출에 있었다. 일본은 달러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수제품을 전후 최대의 시장인 미국시장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산업화를 위한 원료와 석유수입은 산유국 및 원자재 생산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국제수지구조 괴리는 필연적이었고, 따라서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한 통상마찰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산업은 1950년대 경공업→60, 70년대 중화학공업→80년대 조립가공형→90년대 서비스산업 및 첨단산업(하이테크산업)으로 발전되면서 통상마찰 대상품목 역시 섬유→철강→칼라TV→자동차→반도체, 공작기계→컴퓨터, VTR 등 기초소재형의 제품에서 지적집약형 고도가공제품으로 변화되어 왔다. 더욱이 80년대 이후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변화는 과거의 특정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문란시키는 경우에만 마찰이 제기되었던 것이 일본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본 국내의 규제, 상관행, 정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1달러짜리 블라우스(one dollar blouse) 섬유제품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일본은 노동집약형 경공업중심의 산업으로 국내산업 재건과 무역신장을 추구하여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일간의 섬유마찰이 제기되었지만 1952년 미·일간에 체결된 「우호·항해 및 무역협정」의 조약에 의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대외무역교역 대상국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아 주요 대상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에 대한 섬유제품 무역과 1960년까지 무역수지에서조차 흑자를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환경아래 미국 섬유업체의 강력한 요구와 의회, 노동단체 등의 수입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조치는 실시되지 않고 쌍무협정에 의한 일본의 수출자율규제조치로 일단락 매듭지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이고도 동정적인 협상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일본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는 당시의 국제정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표 6> 미·일 통상마찰 사례 연표

협 상 명 칭	협 상 개 요	기 간
· 미일섬유협상	· 최초의 미일경제협상	1957~72
· 미일철강협상	· 트리거(Trigger)가격제도와 수출자율규제	1969~78
· 미일컬러TV협상	· 반덤핑, 상쇄관세 등 다양한 법적 구제절차 이용	1977
· 미일쇠고기 오렌지협상	· 수입억제에서 적극적 수출시장개방전략으로의 전환점	1977~88
· 미일거시경제협상	·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이 협상이슈로 상정된 최초의 협상, 다자간 협상(G7)방식으로 해결됨	1976~78
· 미일NTI협상	· 정부조달을 둘러싼 미일 하이테크 마찰	1978~80
· 미일자동차협상	· 미일무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 수출자율규제방식으로 해결	1981~
· 미일금융협상	· 일본의 자본 및 금융시장개방 협상	1983~
· 미일MOSS협상	· 최초의 패키지 협상, 전기통신, 전자, 의약품, 의료기기, 목재분야를 협상	1985~86
· 미일반도체협상	· 본격적인 하이테크 마찰로 결과지향형협상, 협정불이행과 보복이라는 휴유증을 남김	1985~96
· 미일건설협상	· 일본 정부기관의 조달 관행을 둘러싼 협상	1985~91
· 페어차일드사 매수	· 미일투자마찰이 안전보장 이슈와 연계된 사례	1986
· 미일FSX협상	· 안전보장이슈가 경제이슈와 연계된 사례	1988~89
· 미일인공위성협상	· 하이테크 산업의 정부조달 협상으로 1989 슈퍼 301 조 지정 사례	1985~90
· 미일목재협상	· 관세 및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으로 1989년 슈퍼 301 조 지정 사례	1982~90
· 미일슈퍼컴퓨터협상	· 하이테크 산업의 정부조달 협상으로 1989년 슈퍼 301 조 지정 사례	1982~90
· 미일자동차부품협상	· 일본의 계열 및 배타적 관행을 둘러싼 협상	1986~91
· 미일신원자력협정	· 일본의 핵주권을 상당히 인정한 협상	1978~87
· 미일과학기술협정	·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 공헌 및 균형 잡힌 참가를 요구한 협상	1980~88
· 미일담배협상	· 협상의 성공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등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1979~86
· 미일쌀협상	· 복잡하고 미묘한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계된 사례	1986~92
· 미일외국인번호사협상	· 법제도의 이질성이 문제가 되었던 협상	1974~87
· 미일구조조정협정의	· 일본시장 접근에 대한 구조적 장벽이 문제가 되었던 광범위한 협상	1989~90
· 미일포괄경제협의	· 규제완화, 경쟁정책, 정부조달, 자동차, 보험들을 대상, 객관적 수치 목표 도입여부로 첨예한 의견대립	1993~95

자료: 양기웅(1998), p.66. 「日本經濟入門」(1996), pp.283-284 등 참조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의 성립에 의거하여 GATT에서도 개별분야에 대하여 보호무역조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기에 미국은 섬유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일본을 포함한 섬유수출국과 섬유제품무역에 관한 수량제한을 골자로 하는 장기면직물협정(The Long 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을 체결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수지가 1965년 이후 대일무역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1968년 닉슨은 섬유 수입규제를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고 일본에 대하여 수입제한협정을 체결할 것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미국은 適對通商法(Trading with Enemy Act)을 일본에 적용할 것을 위협함으로써 섬유협정은 미·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섬유업계는 대일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미 수출자율규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971년 8월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여 금태환 금지선언과 함께 일본에 대한 적대통상법을 적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 일본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였다. 이에 다나카 수상은 국내업계의 반발을 수습하고 1971년 10월 15일에 섬유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노동집약적이고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분야에서 시작된 미·일 통상마찰은 일본의 산업화 진전으로 중화학공업분야로 이행되어 한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전자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철강산업이 미·일간 통상마찰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 미국에서 장기적인 철강과업(1959년) 이후 철강수입이 급증하여 철강산업이 위축되자 미국 내에서 수입반대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철강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에 육박했고, 특히 일본의 대미수출이 1965년에 400만 톤을 넘었고 1968년에는 700만 톤에 가깝게 되자 수입반대운동은 더욱 커졌다. 그 결과 미국정부는 1968년 초에 달러방어책의 일환으로 철강수입에 대한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해 여름에 의회에는 鐵鋼輸入割當法案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일본은 미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철강수출을 연간 550만 톤으로 제한한다는 수출자율규제를 발표한바 있다. 1972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수출자율규제의 연장 및 강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일본의 철강업계는 수출자율규제를 1974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연간 수출증가율을 2.5%로 제한하며, 특수강 등에 대한 개별규제를 실시한다는 요지의 회담을 미국무부에 보내게 되었다. 1976년 미국은 수입할당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장질서유지협정(OMA)을 체결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미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철강의 최저가격을 설정하였고, 1984년에 미·일간의 철강협정이 체결되어 최저가격의 실시와 수출자율규제를 계속 실시하였다.

1999년 1월 미국내 아시아산 철강수입이 급증하자 미·일 양국간 무역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은 철강수출을 지난 '97년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쿼타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을 모색하기 시작, 긴장이 고조된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지 등은 1999년 1월 11일 미국 철강업체 및 관련 노조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철강산업보고서에 크게 반발, 수입쿼타제 도입을 미 의회에 요구키로 하는 등 보호주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철강산업보고서에서 미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억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내 철강수출이 급증한 일본은 자발적으로 철강수출을 '97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으며, 일본 통상성 관계자는 “미국내 수요감소 및 엔고에 따라 일본산 철강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발적으로 철강수출을 줄이기로 했다는 미 행정부의 보고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TV를 둘러싼 미·일 통상마찰은 1968년에 제기되었다. 그 발단은 미국전자공업협회(EIA)가 1968년 3월에 일본산 흑백 및 칼라TV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재무부에 반덤핑을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소에 의하여 재무부 및 관세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1971년 3월에 재무부는 협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1976년 9월 미국칼라TV수호협회(COMPACT)는 “1974년 통상법” 제 201조에 기초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1977년 4월 일본은 수출자율규제의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미·일 양국간 협상에 착수하여 1977년 7월부터 3년간 칼라TV의 대미수출한도를 연간 175만대로 설정하여 억제하겠다는 취지의 시장질서유지협정에 조인하였다.

미·일 자동차분쟁은 1976년과 1979년 2차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미국의 자동차업체의 극심한 불황 중에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입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75년의 18.3%에서 1978년에는 17.5%로 떨어진 후, 1979년에는 21.7%로 증가했고, 1981년에는 27.1%로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66.9%를 차지했다<표 7 참조>. 1980년에 미국에서 자동차 불황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집단인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과 포드사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74년 통상법에 의거 일본산 자동차수입에 의한 미국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UAW는 미일 자동차마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처음에는 수입자동차 문제와 실업문제에 관심을 보여 일본 자동차업체에 대미 직접투자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식으로 자동차 문제를 정치문제화 하였지만, 협상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자 포드와 함께 수입자동차 문제를 제소하게 되었다. USITC에서 제소가 기각되자 다시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 새로이 들어서는 레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만들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1981년 3월에 수출자율규제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한편 1986년 5월에는 특정시장 및 분야별(MOSS)협정의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이 추가의제로 채택되었다. MOSS의 다른 의제에서는 주로 정부규제의 철폐가 논의되었으나,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동차회사가 부품조달을 계열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와 기타 배타적 상관행에 따른 문제 등 구조적이고 경쟁정책적 사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분야에서의 일본의 미국내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미국의 1994년 대일 무역적자 규모 660억 달러의 60%에 해당하는 약 400억 달러가 자동차분야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본의 시장개방도를 측정하려는 결과지향적 수치목표(result-oriented numerical target)의 설정을 둘러싸고 통상마찰을 빚어왔다. 따라서 통상문제에 있어서 업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시장을 둘러싼 양국간 통상마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 표 7 > 미국의 자동차 총수입 및 대일수입

(단위: 천대)

	총 수입	대 일 수입	일본수입의 점유율
1970	2,013.4	381.4	18.9%
1978	3,025.0	1,563.0	51.7%
1979	3,005.5	1,617.3	53.8%
1980	3,116.4	1,991.5	63.9%
1981	2,856.3	1,911.5	66.9%
1982	2,926.4	1,801.1	61.6%
1983	3,133.8	1,871.2	59.7%
1984	3,559.4	1,948.7	54.7%
1985	4,397.7	2,527.5	57.5%
1986	4,691.3	2,618.7	55.8%
1987	4,589.0	5,417.5	52.7%
1988	4,450.2	5,123.1	47.7%
1989	4,042.7	2,051.5	50.7%
1990	3,944.6	1,867.8	47.4%
1991	3,736.5	1,789.1	47.9%
1992	3,615.5	1,677.8	46.4%

자료 : Karen M. Holgerson(1998), *op. cit.*, p.200.

미·일간 대표적 통상마찰 사례로 꼽히는 미·일반도체분쟁은 80년대 자동차분쟁 이후 전략적 무역정책에 근거한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기조가 대두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미국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SIA)를 통하여 일본업체들을 1985년 6월 301조에 의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반도체산업은 1984년 후반부터 갑자기 불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불황은 1984년 반도체산업의 과잉설비투자와 1985년에 발생한 컴퓨터의 불황에 그 원인이 있었다. 반도체 불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반도체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1984년 일본의 대미 반도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2,086억엔의 흑자를 보였고 일본의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도 82년 약 35%에서 1986년 47%로 증가하여 미국의 40%를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반도체업체에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의회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거세어지고 대일보복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1986년 5월 USTR대표와 통상성 장관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잠정합의를 보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i)일본의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11개회사는 미국산 반도체의 구입 비율을 높이고, ii)반도체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와 타업체에 대해서도 수입반도체의 구입비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며, iii)일본의 반도체가 싼 가격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회사로부터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감시제도를 도입하며, iv)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간에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1986년 9월 2일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1987년 4월에 시작된 제 2차 미·일반도체협상은 일본시장의 비경쟁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미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자율확대조치(Voluntary Import Expansion: VIE)에 객관적 수치기준(20% 시장점유율)도입한 통상압력 수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제 3차 미·일반도체협상(1996년 2월~1996년 8월)은 미국측이 미·일반도체회의에서 반도체협정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제 2차 미·일반도체협정에서 합의한 20% 수치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이라는 결과 지향적 수입자율확대조치는 일종의 관리무역체제이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며, 일본기업에게만 공정거래가격체도를 부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무 협상에서 다자간 협상을 요구하며 협상연장에 반대하였다. 한편 미국 반도체업체는 일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등 폐쇄적이어서 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일본제품은 미국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공동연구개발조합 등의 형태로 정부가 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정책 방법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경험

곡선 효과로 일단 확립된 비용상의 우위성은 그렇게 간단히 붕괴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폐쇄성과 산업정책은 특정시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꼬리를 무는 문제라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반도체 무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일본측은 유럽, 한국 등 다른 생산국, 소비국을 참가시킨 다자간 형태 안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와 같이 기술진보가 빠르고 더구나 극히 한정된 소수 기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점적 산업에서는 앞으로도 갖가지 형태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Ⅳ.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WTO체제의 출범 이후 세계 통상마찰은 교역확대 및 상호 경제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제기됨에 따라 마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산업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한국보다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여타 국가들이 한국의 특정산업에 대하여 상당히 강도 높은 개방압력을 가하거나, 관세보호 내지는 수입할당을 동원하여 한국에 불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리라 예상된다. 그 단적인 사례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한국시장의 규모확대에 따라 시장개방압력과 이의 해소를 위한 각종 협상이라는 형태로 한국과의 통상관계가 대립과 협조의 양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무역은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 편중되어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한·미간의 교역규모는 1997년 4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제 8대 교역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캐나다, 일본, 멕시코, 영국 다음인 미국의 제 5대 수출시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미 수출규모는 1997년에 216억 달러, 1998년에는 228억 달러인 반면에 수입규모는 301억 달러, 204억 달러로써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대일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인 동시에 수입시장이다. 대일 수출입동향을 보면 1997년과 1998년의 수출규모가 148억 달러, 122억 달러이며 수입규모는 279억 달러, 168억 달러로 대일역조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입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은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조립하여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과 미국의 자회사 내지는 국내토착회사를 통하여 기업내 분업 내지 국제하청에 의해 부

품 및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미수출을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한·미간의 통상 마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일간, 한·일간, 한·미간 국제분업구조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간 통상마찰이 야기되어 온 주종품목은 섬유, 철강, 칼라TV 등인데 이들 품목은 대부분 일본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하여 미국으로 집중수출하는 한·미·일간 삼각무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분업 구조적으로 제 2의 일본으로 인식되어 미·일간 통상협상의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자 한국에도 통상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이들 품목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한·미간에도 같은 품목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한·일 공정간 분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시장에 현저하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제품(특히 반도체)과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내지는 미국 다국적기업에 의해 자본 및 기술을 제공 받아 국내기업이 성장, 독립한 국내토착기업에 의해 생산, 수출되고 있다. 이는 품질, 가격 및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유리한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에 의해 대미수출을 증대시킴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의 우회수출기지로 인식되어 일본이 연속선상에서 한·미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대미흑자, 대일적자의 심한 지역간 불균형은 대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및 미국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생산체제내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요인에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미 통상마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한·미·일의 분업구조가 통상마찰의 대상품목, 전개순서 및 규제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경제에 개방압력을 가하고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점자본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해외의 국제적 독점자본이 한국에도 국내화하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래의 대립과 갈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 경제의 악화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1970년대 부분적으로 미국의 한국산 섬유, 신발 등에 관한 수량규제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의 수입규제는 점차 직접적인 수입제한조치보다는 공정무역(fair trade)의 개념에서 비롯된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간접적 수입제한조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등을 요구하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일방적 통상압력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미국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을 한국에도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일간 통상마찰이 쌍무협상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얻게 될 경우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온 미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통상마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한 WTO 체제 하에서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대국의 제도와 정책이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관심지역으로는 시장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개발도상국 중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10대 신흥경제대국(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미 이들을 소위 빅 이머징 마켓(Big Emerging Market: BEM)으로 명명하고, 향후 미국 수출확대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미·일간 통상마찰은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방법 및 통상정책 방향과 일본의 통상정책의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시장구조 폐쇄성, 과도한 규제, 비합리적인 제도 및 관행의 틀, 세제, 기업의 수직결합 및 독점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원초적으로 양국간의 문화적 패턴의 차이에서 유래하여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구조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연결되어 쌍무적 통상마찰을 발생시키게 된다. 미·일 양국간의 상반된 견해의 차이에서 통상마찰의 심화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의 저축·투자관행, 유통체계,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의 계열관계, 토지이용, 가격기구 등과 같은 일본의 시장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입장을 그렇지가 않다.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정책상의 문제로 인하여 무역불균형이 야기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의 발생동기는 일본의 산업구조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산

업구조는 원료수입의 해외 의존만을 제외하면 소재→중간재→자본재→최종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업부문을 일괄하여 보유한 소위 일괄자급형(one set)생산체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간의 통상마찰 시기는 일본의 산업발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집중호우식 수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진행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수가 많아지고 여기에 격심한 경쟁으로 해외로 확대됐을 때 집중호우식 수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일 통상마찰은 개별산업의 수출문제에서 일본산업과 사회의 존재 방법, 정부의 정책 등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경우처럼, 한국에 대한 시장폐쇄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 시장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예상됨으로 한국은 각종 규제, 불공정 상관행, 유통구조, 재벌문제 등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상마찰이 제기될 경우 가급적 쌍무적인 협상에서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전의 대응적이고 단속적인 통상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한국의 통상정책 또한 국제적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통상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미국의 보호주의 심화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이외의 시장개척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각종 규범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국내제도 및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일 양국은 국제역학관계상 한국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실패한다면, 한·미·일 세 국가의 경제파트너관계는 양국에 심각한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일 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국내시장개방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미·일간의 통상마찰의 완화는 일본경제의 내수확대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 외(1998), 「국제통상론」, 박영사.
- 경제기획협회(1997), 「경제백서: 개혁을 본격 기동하는 일본경제」 EPS, 1997년 8월호.
- 김련석(1992), 「일본경제·무역의 분석」, 문음사.
- 김정수(2000),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 라성섭(1998),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 조사분석9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종수(1991), 「국제통상론」, 동성사.
- 양기웅(1998), 「일본의 외교협상」, 도서출판 소화.
- 왕윤종 외 (1997),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정책연구97-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왕윤종(1997), “97년도 한·미간 통상현안, 그 전망과 대책”, 「통상법률」, 통권 제 13호.
- 왕윤종(1997), 「미국 클린턴 제 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정책연구 9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병택·이영준(1992), 「일본의 수입유통과 유통장벽」, 정책연구 9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aren M. Holgerson(1998), *The Japan - U.S. Trade Friction Dilemma*, Ashgate Publishing Co.
- Paul R. Krugman(1992),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Rambod Behboodi(1994), *Industrial Subsidies and Friction in World Trade*, Routledge.
- Robert A. Blecker(1996), *U.S. Trade Policy and Global Growth*, M.E. Sharpe Inc.
- Ryuzo Sato and Paul Wachtel(1997), *Trade Friction and Econom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miko Mikanagi(1996), *Japan's Trade Policy*, Routledge.